

무리한 선박 증설·부실한 초동 대처 '정조준'



세월호에서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이 27일 오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선원 전원 구속...증축 업체 직원 소환 진도·제주 VTS 압수...교신내용 분석 완도·보성에 부동산 유명언 재산 추적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선원 15명이 전원 구속됨에 따라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세월호 운영과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해 집중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도 세월호 선사(船社)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 유명언(73) 전 세모 회장 일가가 전국 곳곳에 영농조합 형태로 땅을 위장 보유할 정황을 포착, 불법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부 향후 수사=합수부는 27일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68), 3등 항해사 박모(여·25)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엔 조타수 박모(59)씨·오모(57)씨와 조기장 전모(55)씨·조기수 김모(61)씨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로써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이 구속됐다. 합수부는 나머지 선원 12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면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세월호 운영과 관리감독 문제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간 합수부의 수사가 선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향후 수사는 세월호 운영과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해 집중될 것이라는 예이다.

합수부는 이날 여객선 증축 업체인 A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증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지와 설계 도면대로 제작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특히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한 뒤 교신 내용과 CCTV 녹화자료, 항적 자료 등 압수품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또 구명벌 투하시험 업체인 B업체 관계자를 불러 구명벌 투하 시험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합수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평소 안전장비 관리와 선박 정비에 소홀하거나 무리하게 배를 증축(증축)한 점이 드러나는 대로 본사 관계자와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대형 여객선의 안전검사와 운항 관리에서 고질적인 병폐와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 등 안전관리 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응도 살필 계획이다.

◇유명언 재산=유 전 세모 회장 일가는 완도·보성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 회장 일가는 영농조합 형

태로 땅을 위장 보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영농법인인 농지 구입에 제한이 없고 취득·소득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유 전 회장 일가가 조합을 앞세워 재산 증식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27일 완도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0년 무렵 세모그룹이 완도 보길도 부항리와 예송리 등 두 마을에 수만평의 땅을 매입했다.

주민들은 세모그룹이 오대양 사건으로 몰락하기 전까지 당시 보길도 앞 노화를 이복리에 세모조선소를 운영하면서 조선소 앞바다 건너 보길도의 이 땅을 산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 보성 풍중산 다원 영농조합에서 운영 중인 15만㎡가량 차밭은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전국의 땅을 다룬 사람 이름으로 매입하려는 추진 계획서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서엔 전국 각지의 지명과 가격, 담당자 명단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영농조합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세금을 포탈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지난 16일 다른 선원이 해경에 구조되는 사이 조타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서둘러 탈출하고 있다. (위) 이씨는 "조타실에서 침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뒷북 대책'만 쏟아낸 해수부

전산 발권·항해 기록 장치 등 현실성 없어 비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해상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뒷북'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구체적 실현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소나기 피해가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다, 불과 하루 만에 만들어낸 정책을 수십 년 동안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해양수산부는 26일 하루만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3가지 안전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3가지 정책은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 설치 계획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전산 발권 도입 ▲여객선 구조변경 금지 등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당장 전산 발권 제도의 경우 6월부터 시행된다. 승선권 매표 창구에서 승객 인적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승선권을 발급하는 제도로, 선원을 제외한 자동차나 화물차를 탄 여객선에 승선하는 여객(운전자 및 동승자 포함) 전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장흥·목포·여수·고흥 등에서 제주·거문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과 달리, 전남 지역 섬을 도는 차도선(차량을 실을 수 있는 여객선)의 경우 영세성 때문에 전산 발권 시스템을 구비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 '생색 내기식' 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항해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VDR)

설치 계획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 항해 여객선과 3000t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는 항해기록장치를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으로 운영될 연안 여객선에 적용해 탑재한다는 계획이지만 2500만~6000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구체적 실현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 또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아 '말뿐인' 대책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회도 지난해 1월 정부 입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선박 임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등을 1년 3개월 넘게 방치하다 지난 25일야야 가결해 반쪽을 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구조 기다리던 선원들 옷까지 갈아입고 탈출

승객 객실 거들며 보지고 앉고 선실 되돌아가...정복 벗고 사복 착용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들이 구조를 기다리며 선실로 돌아가 여유있게 옷까지 갈아입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구속된 승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전 구조를 기다리던 일부 승무원이 3층 선실로 다시 돌아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지 조타실에 모여있던 승무원들은 구조정을 기다리기 위해 갑판으로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승무원이 선실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갑판에서 자신의 선실까지 가는 사이 수많은 승객들의 객실을 지나쳤지만 구조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첫 교신을 한 시각은 16일 오전 9시 6분. 이후 탈출을 감행한 오전 9시 37분부터 구조정에 오르기까지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여유를 부리면서도 정작 승객들을 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승무원이 구조 당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주요 승무원 15명(선박직원 8명)은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모두 사법처리됐다.

또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들은 탑승한 학생들의 숫자와 적재된 화물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다.

세월호 조기장 전모(55)씨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 "(한창)꽃이 필 시기인 학생들이 (비극적인 일)을 당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화여행 학생들이 배를 탔는지, 갑판에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주요 승무원 신분이었면서도 탑승객 현황과 화물 적재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세월호 승무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변명에 급급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www.kdic.or.kr
www.facebook.com/happykdic
twitter.com/happykdic
blog.naver.com/happykdic

창사 62주년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에 시집가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게 엄마마음이지"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예금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켜드립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알기쉬운 예금자보호법

보호한도 적용범위
1인당 보호한도 5,000만원(원금+소정의 이자)은 금융회사별로 적용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투자예탁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공적신탁 등

5천만원 초과금액과 후순위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1588-0037) 또는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